

· 해설 내용은 개정된 법령(2022. 7월 기준)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지방자치론 전체 기출문제(2012~2021년)는 네이버카페 '김재준 행정학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문 1. 중앙집권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강력한 행정추진으로 국가의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 유리하다.
- ② 규모의 경제 또는 외부효과 조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에 유리하다.
- ③ 중앙부처의 감독계통의 다원화로 인해 지방행정의 종합적 처리가 용이해진다.
- ④ 부처별 전문적 행정분담을 통해 기능별 전문화를 달성하기 쉽다.

문 2.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.
- ② 단체자치에서 중시하는 권리는 주민의 권리(주민참여)이다.
- ③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는 국가(중앙정부)이다.
- ④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기관과 국가하급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.

정답 및 해설

1. ③
- 중앙집권은 행정의 전문화와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, 지방행정의 종합적 처리가 어렵다.
2. ②
- 주민의 권리(주민참여)를 중요시 하는 것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, 단체자치는 중앙으로부터 독립을 강조한다.

구분	주민자치	단체자치
관점	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 (주민참여 중요, 정치적 의미가 강함)	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자치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 (자치단체+일선기관) (중앙으로부터 독립 강조)
자치권 인식	고유권	전래권
사무구분	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음	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
권한부여	개별적 지정(수권)주의	포괄적 위임주의
중앙정부	중앙정부와 기능적 협력관계	중앙정부와 권력적 감독관계

문 3. 헌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,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- ③ 지방의회의 조직·권한·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문 4. 신중앙집권화 또는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·사회적 불균형 해소가 신지방분권의 주요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.
- ②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는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신지방분권화의 동인이 되고 있다.
- ③ 정보통신기술발전은 지방분권화를 통한 분권화의 요인으로 작동할 뿐 신중앙집권화와는 무관하다.
- ④ 신중앙집권화의 관점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적 공헌을 비판하는 입장을 대표한다.

정답 및 해설

3. ①
-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: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,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- 제2항: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.
- 제118조 제1항: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.
- 제2항: 지방의회의 조직·권한·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4. ②
- 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주로 신중앙집권과 관련이 있다.
- ③ 정보통신기술발전은 지방의 정보공유 및 정보처리 능력향상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분권화의 요인으로도 작용하지만, 중앙정부로부터 통제 측면에서 중앙집권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.
- ④ 신중앙집권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를 부정하기 보다는, 중앙집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.

문 5.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인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③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.
- ④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.

문 6. 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, 임기는 2년이다.
- ② 시·군·자치구의 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의회 위원회에는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, 그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.

문 7.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시의회에서 정한다.
- ②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시와 도의 부시장·부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시·도지사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③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·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- ④ 시의 부시장, 군의 부군수,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

문 8. 지방자치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·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부시장·행정부지사, 정무부시장·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·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부지사·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③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정답 및 해설

5. ②

· 외국인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
6. ②, ④(기존 정답: ②)

· ②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: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· ④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(2022. 1. 13.)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위임규정은 삭제되었다.

정답 및 해설

7. ③

-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 제1호: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3항: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는 시·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④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: 시의 부시장, 군의 부군수,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

8. ①

- 지방자치법 제124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)
 -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
 -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.
 - 「의료법」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

문 9.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
-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
-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- ④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

문 10.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문 11.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방세 원칙은?

- 세원이 각 지역에 가급적 고르게 분포되어 지방정부 간 수입이 균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하다.
- 이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적합성이 떨어진다.

- ① 안정성의 원칙
- ② 충분성의 원칙
- ③ 보편성의 원칙
- ④ 신장성의 원칙

문 12. 사바스(E.S. Savas)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 분류에서 민간부문이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향적인 접근방식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이용권지급
- ② 계약방식
- ③ 허가방식
- ④ 보조금지급방식

정답 및 해설

9. ④
· 제명에 대한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
10. ④
· ①, ②, ③ 지방자치법 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이다.
· ④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정답 및 해설

11. ③

- 보기의 설명은 보편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.
- ① 안정성의 원칙: 지방세수의 연도별 격차가 심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.
- ② 충분성의 원칙: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.
- ④ 신장성의 원칙: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가 증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.

12. ①

-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

구분		배열자	
		정부	민간
생산자	정부	· 정부서비스 · 정부 간 협약	· 정부 응찰(판매)
	민간	· 계약 · 허가 · 프랜차이즈 · 보조금	· 바우처 · 시장 · 자원봉사 · 셀프서비스

문 13. 지방교부세법상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아닌 것은?

- ① 부동산교부세
- ② 소방안전교부세
- ③ 특별교부세
- ④ 분권교부세

문 14.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불이익 배제
-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을 위한 최초 선거에서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의원정수는 인구의 증가성을 반영
- ③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로 포함하여 정원 확대 인정
- ④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

문 15.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 자기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사무위탁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.
-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력방식으로 분류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.

문 16.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, 권고, 지도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처리 시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둔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자치 사무에 대하여 서류·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·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정답 및 해설

13. ④

· 지방교부세의 종류: 보통교부세, 특별교부세, 소방안전교부세, 부동산교부세

14. ③

· 지방분권법 제31조 제1항: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포함하여 정원 확대를 인정한다.

정답 및 해설

15. ③

·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없고,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에 비해서 약한 협력방식에 해당한다.

16. ④

·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항: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·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·도지사의,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문 17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포괄적 배분방식이 아닌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.
- ② 자치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자치구의 사무를 일반 시·군에 비해 확대하고 있다.
- ③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고, 이들 도시들은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-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·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.

문 18.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.
- ②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·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·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- ④ 교육감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따른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.

문 19. 지방자치법상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②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.
-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(각하 포함)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.

문 20.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된 적이 없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한 때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

정답 및 해설

17. ②

·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: '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'로만 규정하고 있어, 사무의 범위가 시·군에 비해 확대된다고 보기 어렵다.

18. ③

· 교육자치법 제47조 제1항: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다만,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정답 및 해설

19. ④

·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: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.

20. ①

· 불신임의결과 의회해산권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나, 196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 폐지된 후 다시 도입되지 않고 있다.